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보도자료

보도 일시	(온라인) 2026. 6. 25.(목) 12:00 이후	
	(지 면) 2026. 6. 26.(금) 조간	
담당 부서	조사연구팀	김진석 전임연구원(02-3460-9035) 윤영근 팀장 (02-3460-9033)
홍보 담당	기획홍보팀	이승헌 대리 (02-3460-9052)

“PBS 폐지되어도 산·연 협력 끊겨선 안 돼” 산기협,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 발간

- 출연연 연구자 61.2%, “PBS 폐지 시 기업 협력활동 위축될 것” 우려
- 기업은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과제 축소’를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아
- 산·연 협력 전용 자원,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협력 성과보상체계 등 필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연구과제중심제도(PBS, Project Based System) 폐지 이후에도 산·연 협력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방안을 담은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방안」 보고서를 25일(목) 발간했다고 밝혔다.

PBS는 출연연 연구자가 외부 연구과제를 수주해 인건비와 기관 운영 재원을 확보하는 제도로, 연구자의 책임성을 높이고 산학연 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과도한 과제 수주 경쟁, 단기성과 중심 연구, 인건비 불안정성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출연연 연구자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 임무 중심의 연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PBS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출연연 인건비를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방향의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 경제·인문·사회 분야는 '26년 즉시, 과학기술 분야는 5년간 단계적 폐지

산기협은 PBS가 그동안 기업과 출연연 간 공동연구와 기술협력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만큼, 제도 개편이 산·연 협력에 미칠 영향을 산업계 관점에서 점검하고 필요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 발간을 위해 산기협이 출연연 연구자 24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0.7%는 ‘PBS가 기업과 출연연 간 협력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61.2%는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기업 협력 활동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감소가 예상되는 협력 유형으로는 ▲소액·단기 기업 협력 과제(56.6%), ▲기업 공동연구(48.8%), ▲기업 위탁연구(42.6%) 순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응답자의 69.8%는 앞으로도 산·연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연구성과의 실용화·사업화를 통한 사회적 확산에 도움(73.0%), ▲산업계의 기술 및 현장 애로 해결에 필요(63.7%), ▲국가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57.4%) 등을 꼽았다.

PBS 폐지 이후 필요한 제도적 보완 장치로는 ▲산·연 협력을 위한 출연연 내 별도 자원(예산) 신설(59.5%), ▲산·연 협력 성과에 따른 부서 또는 기관 단위 인센티브 제공(57.8%), ▲임무중심형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트랙 신설 또는 확대(54.0%) 등이 제시됐다.

한편, 기업 설문에서도 산·연 협력의 필요성이 확인됐다. 출연연과 협력연구 경험이 있는 기업 48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77.2%는 ‘출연연과의 협력이 기업 R&D에 도움이 되었다’고 답했으며, 78.9%는 ‘출연연과의 협력에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또한 기업들은 PBS 폐지 이후 출연연의 중소기업 대상 소액·단기 협력 과제 축소(39.6%)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협력 절차의 경직화 및 행정 부담 증가(17.5%), ▲출연연 내 적절한 협력 창구 발굴의 어려움(12.6%), ▲기술자문·애로기술 해결 기능 약화(12.4%) 순으로 응답했다.

보고서는 PBS 폐지 이후 산·연 협력 기능을 유지·확대하기 위한 정책 과제로 ▲산·연 협력 전용 재원 및 지원 트랙 신설 ▲전략연구사업 내 기업 참여 및 수요 반영체계 강화 ▲산·연 협력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 체계 고도화 등을 제안했다.

산기협 김종훈 산업기술혁신연구원장은 “PBS 폐지가 출연연 연구현장의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더라도, 기업이 필요할 때 출연연의 기술과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통로는 계속 열려 있어야 한다”며 “제도 전환 과정에서 산업계와의 접점이 약해지지 않도록 정부와 출연연이 산·연 협력의 새로운 운영방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고서 전문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 산업기술혁신연구원 발간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